

환경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환경부는 올 한해동안 서울의 스모그 일수를 예년의 49일에서 45일 이내로 낮추고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개선 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신년도 업무계획'에서 스모그 발생원인 물질인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동차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대도시 스모그 저감대책을 시행해 시민들이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1만달러 소득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국민들의 환경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의 질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체감환경지수를 개발해 매일 발표하고 민간 차원에서 환경스트레스지수(ESI), 녹색도시지수(GCI) 등 다양한 환경지표를 선보여 환경개선의 살아있는 지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무분별한 개발 시추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 개발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개발업체의 관리를 위해 굴착업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대형 유류오염 및 적조 등으로 명들고 있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 2월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행정 사각지대였던 군부대가 운영하는 유류저장시설, 탄약고, 비행장, 정비창 등의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전국 60개의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군부대 환경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자연과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생태도시 조성사업에 착수, 5-6개의 생태도시 모형 및 설계지침을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내년부터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했다.

이밖에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가지 등 멸종위기에 놓인 희귀성 어류 24종을 내달에 특정야생 동물로 지정하고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평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도 지역특성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시·도 평가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검사항목을 43개에서 50개 항목으로 늘리는 한편 전국의 하천 및

호소중에서 개발규제가 엄격한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비율을 현재의 29%에서 42%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 96년도 주요 업무계획

1. 체감환경의 실질적 개선

가. 대도시 스모그의 집중저감

□ 스모그 발생 원인물질인 미세먼지등 오염물질 감축대책 강구

○매연여과장치 부착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을 7만톤 저감('94년 165만톤→'96년 158만톤)

○청정에너지의 공급확대로 산업·발전·난방부문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38만톤 감축('94년 288만톤→'96년 250만톤)

스모그 발생일수 : 49일→45일(년간)
미세먼지 초과율 : 60%→55%

□ 오존경보제를 서울지역외에 인천지역에까지 확대 실시하고, 경보발령시 노약자·어린이의 야외활동 자제등 행동요령을 구체화하여 전파

○'97년부터는 6대 도시로 확대하고, 예보제를 병행 실시

나. 지하상가·지하철역 등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개선

□ 「지하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정 추진('96.2. 입법예고)

○지하철역·백화점 등의 환기시설 설치기준, 유해물질 발생건축자재 사용규제, 환기시설업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하 및 실내 공기질 관리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96.3~12, 2억원)

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금년부터 전국 613개 정수장에 대한 정밀기술진단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시설 보완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강구

○민간수질전문가와 공동으로 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신속한 대응조치 실시 (각 가정의 수도꼭지등 3,930개소)

수도물의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강화

○25개 유해물질에 대해 조사하여 현재 43개 항목인 수질기준을 50개 항목으로 확대

	'95	'96계획	'97~'98	2002까지
수질기준항목	43	50	85	120
조사대상물질	22	25	50	84

라. 도심 소하천등 수질환경 정화

악취발생등 주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도심 소하천을 주민 친수공간으로 탈바꿈

○금호강등 46개 하천에 지방양여금 326억원을 지원하여 집중적인 오염정화 사업 실시

○민간차원에서 「1사 1하천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유도

하천·해양 수질개선을 위해 질소·인 규제실시

○하천의 녹조, 해양의 적조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인과 하천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규제시행

규제기준이 엄격한 청정지역의 범위 확대

○하천, 호소, 상수원 보호지역 등을 1등급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청정지역 지정범위를 확대 (29%→42%)

마.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및 위생처리

쓰레기 종량제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청소행정 서비스의 향상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 단속 실시

○재활용품 처리 기반시설 확충 및 소비확대 방안 강구

쓰레기 종량제를 생활개혁운동으로 재점화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종량제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자치단체별 종량제 실적 평가제를 도입·시행

음식물 쓰레기등으로 인한 악취 제거

○음식쓰레기의 장기 적체등으로 인한 악취가 없도록 우기등에는 쓰레기 수거주기를 조정·단축

환경관리인. 1996. 2

바. 조용한 생활환경 확보

학교등 정온대상지역에서의 소음·진동규제

○학교·도서관 등 정온대상지역을 생활 및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

—'96년에 경기 양주군, 제주도 등에 생활소음·진동규제 지역 지정

—시급이상 도시중 정온이 요구되는 지역에는 건설소음·진동규제 실시

고소음기계류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제 실시

○굴삭기·항타기 등 고소음 기계류 8종에 대하여 소음표시를 하여 판매하도록 권고

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지표 개발 촉진

체감환경지수의 개발

○대기·수질·폐기물 등 단편적 환경질이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의 질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와 환경지도의 개발 및 활용

지표 동식물을 통한 환경질 평가방법 개발

○옆새우, 강도래 등 수질지표 생물을 통해 하천 물 맑기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 개발·보급

○도시 대기오염과 상관관계가 큰 나무를 상습 오염 지역에 심어 지역내 공기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

민간차원에서 환경스트레스 지수(Environmental Stress Index), 녹색도시지수(Green City Index) 등 다양한 환경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유도

아. 체감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수립

배경

○제1차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이 '96년에 완료됨에 따라 '97년부터 시행할 새로운 중기계획 수립('96. 10)

추진방향

○환경개선을 위한 5년 단위의 투자 및 시책사업 구체화

○환경비전 및 대기·수질 등 분야별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2. 하천 수질의 개선 및 넉넉한 상수원수 확보

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 '97년까지 총 15조9천억원을 투자하는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 추진

○ '96년 1조3,145억원을 투자, 하수처리장 162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68개소 신·증설(하수처리율 45% → 50%)

□ 환경기초시설 민간전문 운영관리체제의 도입

○ 시·군에서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전문 기관에 시범 위탁·운영하여 처리효율 향상 및 운영비 절감방안 마련('96.4)

○ '96년 분뇨처리장, '97년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나. 상수원 보호지역 관리제도 개선

□ 상수원보호를 위한 팔당·대청특별대책지역 관리 개선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 및 완벽한 오·폐수 처리를 전제로 한 개발육구 수용방안 마련('96.10)

□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실시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수해지역 수도사업자의 출손금(70%)과 국고보조금(30%)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194억원)

□ 환경보전형 영농방법 확대를 위한 지원

○ 유기농법등 환경보전형 영농방법의 확대보급을 위해 유기질 퇴비 및 생산품 판매망 구축등 지원방안 마련('96.10)

다. 사업장에 대한 배출규제의 합리화

□ 오염물질 규제방식 개선

○ 현행 농도규제방식이 '97년부터 배출총량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량배출부과금 제도의 시행 기반을 마련

□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제도 개선

○ 배출시설 허가제를 단위시설별 허가에서 공정단위별로 전환하여 행정절차 간소화(1공장 1허가증)하고, 사업장별 오염원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라. 수질오염 사고대비 감시기능의 강화

□ 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감시체계

확립

○ 환경오염우심지역과 사고빈발지역의 철저한 조사 및 감시강화로 환경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봉쇄

○ 공공수역 수질자동측정체계 구축 및 환경공익요원 등을 배치, 수질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하천감시활동 강화

□ 수질오염 사고대비 위기관리능력 제고

○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등 공조체계 확립, 방제장비 비축 및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실시

마. 지하수오염 방지 대책 강구

□ 지하수 개발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개발업체의 관리를 위해 굴착업 등록제를 도입

□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폐공 예치금제 도입 등 폐공으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 추진

바.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한 식수원의 다변화

□ 하천 복류수 및 강변 여과수 개발

○ 부산·경남지역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시범추진

- 4개 후보지 시추작업 및 하루 1만톤 규모의 취수시설 설치(국고 25억원)

○ 영산강 유역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사전조사 실시('96.7)

□ 광역상수도 건설

○ 합천댐 하류 황강에 하루 100만톤의 광역상수원을 개발

- '96하반기 공사착공하여 '98년까지 완공(총사업비 3,375억원)

○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인접 자치단체간 상수도 공동개발사업 추진

□ 청정한 소규모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 '96년중 저수지의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계획 수립('96.11)

사. 고도정수처리 및 수돗물 공급계통 혁신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 1,089억원을 투자하여 17개소에 설치될 추진, 그중 8개소를 완공(동두천, 원주 제2, 진해, 김해 등)

□ 낡은 상수도 시설 및 장비교체

○ 노후관 개량 2,591km, 취·정수장 개량 86건, 수

점검사장비 85대를 추가 도입(2,600억원)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아.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방상수도 개발

중소도시 상수도 개발 지원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시·읍 지역)를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비의 50%를 국고 용자

-300억원으로 21개 지역 개발 추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004년까지 농특세 4,000억원으로 면단위 농어촌 지역의 생활용수를 개발

-400억원을 지원, 36개 지역의 생활용수개발 사업 추진

도서지역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중심도서에 저수지를 건설하여 인근도서에 상수 운반급수하는 체계를 구축('96.4월까지 중장기 종합 대책을 마련)

○전남 진도군 조도면 지역에 시범사업 실시('96.4~12)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농어촌의 마을단위 간이상수도중 시설개량이 필요한 8,513개에 대한 중장기 개량계획 수립('96.4)

정수장 운영관리 개선

○정수장 기술지원단을 환경부,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 수자원공사 합동으로 확대 개편

○환경관리청별로 관할구역내의 정수장에 대하여 반기별 지도점검 실시

3. 해양환경 관리체계의 개선

가.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수립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을 수립('96.2)하여 해양보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및 체계적인 해양보전대책 추진

나. 연안해역의 적조 방지 대책 추진

「특별관리해역」 지정·관리 방식 개선

○해수면 위주 관리에서 해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부까지 포함시키고, 오염유발시설 설치 제한과 오염물질배출의 총량규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오염우심해역 준설사업과 어장정화사업 실시

○퇴적오염물질 준설사업과 「푸른바다 가꾸기 청소

환경관리인. 1996. 2

다. 해양 유류오염사고 예방 및 조기방제기능 강화

해양 유류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조선의 전용항로를 설정하고, 일정규모 이상 유조선 접안시 방제선 운항등을 의무화

초동방제기능 강화를 위해 방제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민간 방제업 신설 및 긴급 방제자금을 설치 운용('96년 100억원)

라. 해양환경조사의 과학화·체계화 및 연구기능 강화

해양환경조사선(해양환경 1호)을 운영하여 해양오염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적조 원인 규명·방지 기술 및 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연구기관간 협력 체계 확립

4. 폐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의 안전처리

가. 사업장 발생 폐기물의 감량화·재활용 유도

자율적 폐기물 감량목표제 도입·시행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마련('96.6)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하도록 유도

포장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감량화

○TV, 냉장고 등 6개 가전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여된 감량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96.2까지 업체별 계획 제출)

폐자원 사용을 제고로 자원 재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

○종이·금속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업종에 대하여 기설정된 폐자원 사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자동차·가전제품 등 재활용 촉진 대상품목은 생산시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와 재질로 전환 촉진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제도의 현실화

○실제 회수·처리비용에 상응하도록 예치금·부담금 요율을 조정

나. 음식을 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구축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적 감량화 추진

○농산물의 규격포장 출하능가에 대한 지원으로 폐기물의 산지처리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농산물시장에 자체 퇴비화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관계부처와 협

의

퇴비화 시설 시범설치 및 자원화 기술개발

○1일 15톤 처리규모의 퇴비화 시범시설('96.6) 및 군부대, 교도소 등 집단급식소의 감량화 시범시설을 설치·운영

○퇴비의 공정규격 설정('96.8) 및 퇴비화, 사료화 기술 등 지속적 연구개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의식개혁운동 전개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종사회 단체 및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홍보 강화

다. 재활용품 처리기반 확충 및 재활용산업 육성

재활용품 중간처리시설 및 비축시설 확충

○경제성이 낮아 민간에서 처리를 기피하는 폐플라스틱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중간처리시설을 확충 -폐플라스틱 처리시설 7개소(파쇄시설 6, 재생시설 1)를 설치하여 연간 4만5천톤 처리

-수집량이 급증하여 재고가 심화되고 있는 폐유리병 중간처리시설 2개소 설치(개소당 7천5백톤/년, 96.10월 준공)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활용품 비축시설을 설치(경기시화 33,900톤 규모, '96.12월 준공)

재활용산업 육성 및 재활용 제품의 시장 확대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설정 및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소비확대 추진

○영세한 재활용 업체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95년 190억원→'96년 300억원)

○녹지지역 및 도심지역 주변에도 민간재활용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추진 (관계부처와 협의)

라. 폐기물 위생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

광역매립지 및 소각시설의 지속적 확충

○광역매립지 16개소의 설치비 50%를 보조(250억원)하고, 소각시설 13개소의 사업비 30%를 용자 지원(191억원)

○전국 136개 지역별로 15억원씩 보조, 2004년까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96년 15개소, 225억원)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도서지역 43개소에 대하여 '97년까지 소형소각시설 설치자금 50%를 용자지원('96년 18개소, 24억원)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기존의 화성·온산·군산처리장외에 수도권(시화), 영남권(창원), 호남권(광양)에 권역별 공공처리장을 설치(201억원)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개선

○사용중인 1공구의 시설보완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새로 착공할 3공구에 대한 완벽한 설계·시공 추진

○상근조합장제 도입등 조합운영관리방식 개선

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련 집단민원의 해소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지역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입지선정단계부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주민불만요인 사전 제거

시설인근지역에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처리수수료의 10% 범위내에서 기금을 조성, 주민지원사업 실시

시설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정기적인 주변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바. 과학적 폐기물 관리기반 구축

'96 폐기물 센서스 실시('96.1~'97.3)

○지역별,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등에 대한 표본조사(112억원)

-생활폐기물은 주거특성별로 지역별 표본 100~250개소를 선정, 계절별로 1회씩 조사

-사업장 폐기물은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000개소 선정 조사

○생활방안

-폐기물의 지역별, 발생원별, 성상별, 업종별 데이터베이스 구축(5년마다 재조사)

-전국적인 폐기물 처리실태, 재활용 가능량 분석 및 지역별 적정처리시설의 수요분석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 및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정 추진

5. 대도시 및 공단지역 대기오염의 점진적 개선

가. 자동차 배출가스의 총량삭감 관리 체계 구축

□ 매연여과장치의 성능 입증을 위한 실차시험을 완료하고, 서울의 시내버스와 청소차량 등 3,500대에 부착(50억원 용자 지원)

□ 중·소형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산·학·연 합동으로 저공해 핵심기술의 공동 개발을 추진(국고 10억원 지원)

□ 초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기반 조성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관 계법(고압가스관리법등) 개정 및 충전소 3개소 설치
○초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면제 추진

나. 청정에너지의 공급 확대

□ 서울 및 수도권지역 68개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B-C유를 LNG로 대체(총 749개 단지중 622개 대체 완료)하고, 저황 B-C유의 황함량을 1.6%→1.0%로 강화하여 14개 시·군에 확대(총 36개) 공급

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618개소) 및 특정유해 물질 배출업소(1,800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년중)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성능 점검을 위한 기술지침을 강화('96.4)하고, 각종 대기 오염원에 대한 종합 센서스를 실시('96.5)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시범 지정 관리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기환경 규제지역 으로 시범 지정

□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오염 배출량 삭감계획을 포함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는 실천 계획을 승인·평가 및 지원

마. 울산·온산지역에 대한 지역총량규제 시범 실시

□ 대상업소별 오염물질 삭감계획 수립('96.1)

○대형 배출업소에 대한 1단계 삭감(전체 배출량의 53%)을 위한 저황유 공급(1.0%→0.3%, '96.7월부터 환경관리인. 1996. 2

터)

□ 배연탈황시설 설치등 업소별 삭감계획의 이행여 부 확인

□ 추진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타지역으로의 확대 실시 방안 검토

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공동조사 실시

□ 한·중·일 인접국 상호간의 대기오염 장거리 이동상황에 대한 본격 조사 실시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추진위원회 개최(4회) 협의

□ 항공기 및 지상관측을 통한 오염물질의 입체적 분포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오염물질의 이동 및 확산경로를 과학적으로 분석·활용

6.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가. 중요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보호대책 추진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칠원평야등 비무장지대 민 통선지역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 (610km²)

□ 습지보호를 위한 정밀조사 및 대책 강구

○서해안 한강하구, 서남해안의 주요갯벌 생태계 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

-강화도 북부, 득량만, 울산 무제치늪 등 주요 습 지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갈등 조정방안 연구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및 생태관 광(Ecotourism) 도입등 지역활성화 방안 강구를 위한 용역시행

나. 훼손된 국토환경의 치유·복원사업 전개

□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 실시

○도로건설등으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야생 생물 이동통로를 시범 설치

-지리산 심원계곡 또는 태백산맥 구룡령 중 1개소 (66억원)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으로서 인위적 훼손에 의해 급속히 육지화 되어가고 있는 대암산 용늪 복원사업

시행

□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그린 네트워크」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보급

다. 21세기형 생태도시(Eco-Polis) 조성사업 착수

□ 도시의 구조와 기능이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에너지 절약·자원재순환이 극대화되는 21세기형 생태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96.9)

○5~6개의 생태도시 모형 및 설계지침을 개발하고, 각 도시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도시 조성사업을 '9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라. 생물다양성 보전

□ 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국가전략과 실천계획을 작성('96.6)

□ 멸종위기·희귀어류 보호대책 마련

○금강모치·열목어·버들가지 등 멸종위기·희귀어류 24종을 특정야생동물로 추가 지정·고시('96.2)

□ 미생물 및 그 제제의 환경안전성·효능에 대한 검정체계 확립등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유전적 변형생물체(GMO)의 환경분야 검정지침 제정 추진

마.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및 신뢰성 제고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및 검토기능의 전문성·책임성 확보방안 강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설립 추진('96.12)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외의 개발사업도 지역특성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시·도 평가조례를 도입('96 상반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7. 생태적으로 건전한 토양의 유지관리

가. 토양오염원 관리강화

□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

○토양측정망을 국가망·지역망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측정항목을 카드뮴등 6개 항목외에 유류등 5개 항목을 추가('96.1)

○석유류,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등을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지정하여 오염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정기 오염도 검사 실시

○사업종료된 폐기물 매립지, 축사 등 비지정유발 시설의 실태를 조사, 토양측정망에 포함시키거나 대책지역으로 지정

□ 군부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오염 유형별로 60개 군부대를 선정, 국방부와 합동으로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부대 중장기 환경개선종합대책을 수립

나. 광산지역 토양오염 방지 및 오염토양 복원

□ 휴·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추진

○'96년중 대구 달성, 영덕 서정, 밀양 구운동 등 3개 광산에 50억원 지원

□ 오염된 토양의 복원 기술 개발 및 보급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토양복원기술을 분석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복원 및 정화기술을 개발 보급

○토양중 농약 잔류량에 대한 공정시험방법 및 잔류허용기준 제정을 추진

8.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및 위해성 저감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 산업의 고도화로 화학물질의 위해성 증가와 환경독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96.4)

나. 유해성평가 방법의 개선 및 심사강화

□ 선진화된 유해성 평가방법(SAR) 활용

○독성자료없이 유통되는 3만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에 활용

□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전문 독성시험연구기관 육성

○OECD 가입등에 대비하여 선진국 수준의 독성시험연구기관(GLP 시험기관)을 육성

□ 유해성 심사 강화 및 감시물질제도 도입

○유해성 심사에 잔류성·축적성 등을 추가, OECD 수준으로 강화

○유독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잔류성, 축적성이 높아 만성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을 “감시물질”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

다.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 감소대책 강구

-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제도(TRI)를 도입하고, 환경독성을 고려한 배출규제방안 도입 검토
- 선진국에서 이미 사용제한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유해성이 문제되는 물질은 사용제한 물질로 지정

라.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체계 구축

-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를 토대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유독물질업소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의무화등 지도·단속 강화

9.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가.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강화

- 수요자 중심의 환경기술개발 추진
- 사전오염 예방차원의 환경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제3세대 환경기술인 「환경복원 및 재생기술」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과제를 대폭 발굴
-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과제 발굴('96 상반기)
- 실용성과 경제성 위주의 기술개발을 위해 과제 선정시 분야의 배점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국내 환경문제의 해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 수출가능성이 큰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 확대

○G-7 프로젝트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95까지	'96	'97~2001
계	4,315	938	412	2,965
정부	2,495	421	227	1,847
민간	1,820	517	185	1,118

기술개발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

- 각 부처 및 출연연구소 등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기술개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기술개발을 주도해 나갈 선도기관(Leading Agency)의 역할 제고방안을 강구

나. 종합환경연구단지의 조성

- 수도권 매립지 제2-1공구에 국제적 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2001년까지 총 1,489억원 투자환경관리인. 1996. 2

자, 24만평)

구분	계	I단계	II단계
부지면적	24만평	14만평	10만평
입주기관	10개 기관	연구원, 교육원 등	KETRI, 생물자원보존관 등
사업기간	'92~2001	'92~'99	'97~2001
사업비	1,489억원	745억원	744억원

○ I 단계 부지성토공사 완료 및 연구원·교육원 건축공사 착공

-21세기 정부의 환경개선의지를 상징하는 건물설계를 위해 관계전문가로 건축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II 단계 사업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등 행정절차 추진

다. 환경산업의 중점 육성

- 분산관리되고 있는 30여종의 환경산업체를 종합관리하고, 국제환경산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특성화·전문화 유도
-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의 지속적 확대 및 지원액 현실화('96.3)
- '95년 610억, 업체당 2억원→'96년 946억, 업체당 3~4억원

라.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내실화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지침을 개정('96.3)하여 심사방법 및 기준을 내실화하고, 현재 1년 단위 지정기간을 확대
- 풀(Pool) 형태의 심사단을 구성하고, 업종별로 상대평가하여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제고

10. 지구환경보전 및 한반도 환경협력 증진

가. 환경·무역연계 움직임에 대한 능동대응

- 세계무역기구산하 무역환경위원회(WTO/CTE)등에서의 논의 쟁점을 분석하여 대응방안 강구
- WTO/CTE 논의 내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96.2, 서울)
-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환경친화적 생산·소비패턴 유도, 환경기준의 선진화등 대응방안

추진 및 WTO 무역 환경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

업등 6개 사업 수행

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노력에 적극 동참·기여

-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의 적극 이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 수립
 - 공중의 환경인식 증진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96.10) 및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
- 개발도상국의 지구환경보전사업 지원
 - '96년도분 224만불을 지구환경금융(GEF)에 출연하고, 개발도상국 환경공무원 40명을 교육·훈련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환경협약에 능동대처
 - 생물다양성 협약,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31개 환경협약 논의에 적극 참여
 - 국제 습지보호에 관한 람사협약 가입 추진

다. 한반도 및 동북아 주변지역 환경협력 주도

-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환경협력 증진
 - 한·일, 한·중 협력
 - 제3차 한·일('96.2, 동경), 한·중('96.5, 서울)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
 - 한·중 양국간 환경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중국방문 추진('96.6)
 - 제5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중국) 및 ESCAP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 참가('96.2, 몽골)
 - 남·북 환경협력 추진
 - 한반도 환경공동체 회복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사업 모색
 - 독일통일에 따른 환경통합사례를 연구하여 한반도 통일후의 환경정책방향 정립

라. OECD, UNEP 등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

- OECD와의 협력
 - OECD 환경정책위원회등에 참가하여 우리의 환경정책과 입장을 설명하는등 환경분야 OECD가입 대비에 철저
- UNEP, UNDP와의 협력
 - UNEP의 북서태평양 해양보전실천계획(NOW-PAP)을 통한 연안 및 해양환경의 통합관리등 구체적 실천계획 논의
 - UNDP와 국가협력사업으로 Green GNP 개발시

11. 녹색 시민환경운동의 지속적 확산

가. 민간환경단체 협조 강화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확대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의 활성화 및 각종 위원회에서의 참여 확대를 통해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
 - 환경정보지, HITEL 등을 활용하여 환경정보 신속 제공
-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 재정여건이 취약한 민간환경단체에 대하여 과도기적으로 국고보조 및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재정확충을 통한 기금지원 확대 추진
 -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후원 및 각종 자료 제공

나. 시민감시 및 봉사활동 전개

-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정착
 - 지역별 소모임 제도를 통한 오염행위 감시체계 구축 및 지역환경 모니터체 실시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과 명예환경감시원과의 연계운영강화
- 환경자원봉사제의 활성화
 - 초·중·고 및 대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발적 참여분위기 확산

다. 환경교육의 내실화

- 환경교육·홍보 마스터플랜 수립('96.8)
 -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전반과 환경보전홍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 제시('97~2001)
- 학교환경교육 지원 강화
 - 중·고교 환경과목 선택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대학교 환경교육(교양과목) 확대 추진
 - 환경교사 양성 및 연수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보전 시범학교의 우수운영사례 발굴·확산('96 하반기)
- 사회환경교육 기회 확대
 - 민간단체의 “시민환경구좌”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환경교육 강사요원에 대한 특별교육·현장견학 실시
 ○우수환경도서 선정·시상 등 환경관련 도서출판 활성화('96.6)

라. "환경보전 생활화" 홍보 추진

□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대중매체를 통한 새로운 환경정책의 수시 홍보 및 대상별·매체별 홍보전략 개발·시행

○「환경의 날」, 「지구의 날」, 「물의 날」 등 환경관련 기념일을 계기로 각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 개최('96 상반기)

□ 환경보전 실천 생활화 도모

○학교, 가정, 사업장 등 대상별로 특성에 맞는 실천항목을 선정,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 제작·보급(지참형, 부착형)

신기술 개발 실용성 위주 지원

환경부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 학계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연구비의 지원기준이 실용성 위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7일 올해 G-7프로젝트 중 환경공학기술 개발사업비로 책정된 4백12억원(산업계 부담금 1백85억원 포함)을 연구성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고 기업이 현장에서 오염방지 신기술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지원해주시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산업계 및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개발에 연구비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실용성과 경제성 위주의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과제 선정시 이분야의 배점 비율을 종전의 30%에서 60% 이상으로 높여 현장활용 능력이 뛰어난 연구과제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학계 및 연구소 등이 금년 상반기 중에 제출한 금년도 연구비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를 10월까지 실시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1백건 내외의 연구과제를 선정, 건당 평균 4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관리인. 1996. 2

환경부는 또 연내 환경공학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함으로써 환경의 세기로 다가오는 오는 2000년대에 환경기술 수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정부가 환경기술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정부부처 및 출연 연구소 등에 분산돼 있는 환경기술 개발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기술개발을 주도해나갈 선도기관을 선정해 이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하천 주변업체 환경기술지도 강화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전국의 주요 강과 하천 등지에 각종 오염물질 배출,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업체들에 대해 환경기술 지도가 대폭 강화된다.

통산부는 앞으로 낙동강 유역의 대구 염색업체들과 금강 주변의 대전 제1, 2, 3, 4공단, 영산강 부근의 하남공단, 나주공단 등 주요 강과 하천유역의 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1월 22일 밝혔다.

통산부는 또 경기 북부지역의 수질오염 원인으로 지목되는 동두천 피혁단지등 수도권 일대 하천주변의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에 대해서도 환경기술 지도를 하는 한편 청정기술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산부는 최근 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 전국 업종별 단체들을 상대로 청정기술 수요 등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생산기술연구원안에 '청정기술개발사업단'을 설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통산부 관계자는 날로 늘어나는 업체들의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줄이고 수질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들의 중간 공정을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주요 하천·유역의 업체들 뿐만 아니라 하천과 멀리 떨어져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환경 기술지도와 청정기술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1월호보 62쪽 내용중, 원일환경(주)은 (주)원일환경(대표이사·송정대/경기도 시흥)과 동일업체가 아님.